

特別企劃

품목별 농산물 포장화 문제점과 대응책 포장배추의 적정 거래 질서 확립이 긴요

농민저널 편집국장
김 창 동

목 차

1. 우리나라 농산물 포장화 개괄
2. 농산물 포장화 부진 품목
3. 배추포장화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책
4. 농산물포장화의 개선방향
5. 포장배추의 적정 거래 질서 확립

1. 우리나라 농산물 포장화 개괄

백화점 식품매장이나 우리농산물 대축제 같은 식품전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식품포장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주 세련된 선진국 수준은 아닐지라도 불과 10년전의 조악한 모습은 구경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포장학 권위자 나카이 히데카즈(中井英一)씨도 “한국의 식품포장은 일본이나 유럽에 뒤질게 없다”고 평했다. 돌아보면 60~70년대 초까지만해도 서민층의 포장재료는 신문지, 포대종이(시멘트) 또는 골판지상자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디자인 포장학의 발전은 그나라 국력 신장과 비례한다고 봐야 한다. 말 그대로 산업포장, 산업과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 포장기술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농산물포장화 진척이 늦어진데는 산업발전수준 이외에 오랫동안 민족의식을 지배해온 유교사상과도 연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웃만 맵싸나게 입어도 “겉멋들었다”는 편찬을 듣기 일쑤고, 속이 덜찬놈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신문의 인물평도 외유내강(外柔內剛) 일색이다. 내실을 강조할뿐 외적인 멋은 항상 뒤처지기 마련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좀처럼 결포장에 신경 쓸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물자도 절대 부족한 시절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조상들의 포장기술엔 지혜와 재치가 번뜩임을 엿볼 수 있다. 시쳇말로 완전무공해 바이오(Bio) 포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달걀 꾸러미. 보온 방습 충격방지 통풍에 쓰레기 해결까지 완전무결한 포장이 아니겠는가.

가마니, 바구니, 항아리, 보자기, 구력 같은 것들이 다 선인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포장 문화유산인 것이다.

상업농의 개념도입이 늦어진것도 농산물포장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그 대신 농산물의 보관·저장문제에 관하여는 깊은 궁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쓸 종자의 보관이라든지, 겨우내 먹고살 양식, 조상님 제사때 쓸 제수용품의 보관은 필수적이었다. 농가 제1호의 다목적 창고는 단연 광(토광)이었고, 다음은 구덩이를 파고 묻는 땅속 저장술인데, 이것이 요즘 말하는 실온저장, 보온저장, 냉온저장, CA저장이라는 것들이다.

2. 농산물 포장화 부진 품목

UR-WTO 등 개방화 세계화속에서 급속한 소비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5일장(재래시장)은 간신히 명맥만 이어

지고 「까르푸」「마크로」 등 다국적 현대형 유통업체들이 물결을 일으킨다.

교통과 물류체계와 맞물려 배추, 무, 대파등 과거에는 생각도 못하던 채소류의 포장화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거기다 쓰레기 처리난이 가중되면서 가락시장 등 대규모 공영시장의 채소유통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

그전에는 배주라면 김장용 가을배추만을 생각했으나 종자기술·재배기법의 발전에 힘입어 근래에는 △ 고랭배추 △ 얼가리배추 △ 월동배추 △ 김장배추 등 연중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배추 재배현황은 4만ha에서 연간 2백50만t이 생산된다. 이들 물량은 5t트럭 50여만대분이다. 전적으로 산물상태로 유통되다보니 쓰레기 발생 등 복잡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포장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비단 배추뿐만이 아니다. 무, 수박, 파, 양배추, 양파, 마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산물쓰레기의 60~70%가 무배추에서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배추의 소포장화가 농산물유통의 큰 이슈가 되었다. 표준화 규격화 포장화가 절실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61개 품목에 대한 규격포장을 권장해왔으나, 성과는 미흡했다. 급기야 지난해(96년)부터는 정부가 직접나서 배추 등 중요품목의 포장화 사업을 쟁기고 있다.

지난 10월초 유럽공동체(EU)에서 일어난 트럭운전사들의 스트라이크를 뉴스에서 보듯이 그들은 우리처럼 농산물을 무개차에 산물상태로싣는게 아니라, 1백% 탑차수송을 하고 있다. 콜드시스템이 되는 탑차인 것이다.

미국의 「현츠포인트」를 비롯, 일본의 오타(大田), 프랑스 「현지스」시장 등 어디를 가봐도 우리처럼 무질서한 쓰레기 문제를 찾기 힘들다. 가락시장에서만 연간 15만톤, 57억원의 쓰레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3. 배추포장화 추진상의 문제와 대응책

◇ 산지에서의 해결과제

산지의 문제점은 제도적인 준비미흡과 생산농가의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포장화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은 농가 잘못만이 아니라 농민들 입장에서는 유통선진화 같은 거창한 구호나 명분은 별관심이 없다. 포장화되면 가격이 떨어질것인지 높아지는지가 급하고 작업하기는 어렵게 될지 등을 걱정하는 것이다. 결국 농민에게 불이

익·불편이 돌아가게 되면 이 사업은 실패할 것이고 이익, 편리가 보장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점을 감안, 당국은 포장박스값 58%를 보조하고 시장내에서의 경매 우선권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전거래 관행이 90%를 차지하고, 다수 출하주(농가)에서 소량출하를하게 되며 노지작업시는 규격선별이 곤란한 것 등 산지에서 해결되어야 할 포장화 걸림돌이 많다.

출하규격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속박이 출하가 발생하는가 하면 포장재값 42% 본인 부담과 2명 인건비 추가발생 그리고 경락가 불안심리도 농민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 도매시장에서의 해결과제와 대책

이 사업의 성공여부 키는 시장이 잡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시장 거래행태와 유통주체간의 협력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포장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도 시장내의 복잡한 문제 때문이다. 우선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이해집단이 너무 많고 이들의 기득권 주장은 한치의 양보가 없이 팽팽하다.

언필칭 「고질적 7단계 유통」을 어느날 갑자기 3~4단계로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단계마다 관여된 유통주체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몫이 줄게될 때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무리한 투쟁과 집단 행동도 불사케 된다.

도매업인 중도매인, 수집상(유통인연합회), 하역노조의 입장이 서로 각각 다르다. 그런가하면 조건부 중도매인들의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포장화 사업은 완전히 「동네공사」가 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시범사업 실시이후 수많은 마찰이 있었고, 급기야 지난 5월에는 경매거부 사태까지 빚어진 후 포장화 사업은 지리멸렬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포장화에 따른 투명거래다. 그동안은 2천2백~3천포기까지 실리는 산물경매에서 중도매인들에게 2~5백포기의 「산」-(덤의 일종)이 인정되었으나 포장 BOX는 숫자 포기수가 명확케 돼, 이것이 곤란케 되었다. 그뿐이 아니라 하역노조 입장에서는 밥그릇이 날아갈 판이고 다듬기 아주머니들도 생업을 잊게 된다. 심지어 포

장래 업체의 경쟁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얹힌 이권다툼은 보이지 않은 장애요인이다.

◇ 수송장비와 패렛트 문제

규격포장(박스) → 표준규격 패렛트 적재 → 광폭 차량탑재 → 지게차 하차와 패렛트 경매 → 소비처 배송. 간략한 농산물 분류흐름에서 보듯이 단계별 보조 장비와 기구가 필요하다.

물류표준화는 말 그대로 산지의 수집단계로부터 분산판매 나아가 해외수출단까지 어느 곳에 적재되지 않고 신체의 혈류흐름처럼 원활히 유통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규격포장과 표준화된 패렛트는 필수적인데 10가지 20가지되는 포장재는 말할 것도 없고 받침대 패렛트 마저 유럽식 미국식 한국식이 서로 달리 혼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차량의 적재함 규격과도 맞지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1100mm×1100mm 표준패렛트 사용비율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차량의 들고나기 쉽게된 시장구조, 지게차, 콜드체인시스템 등 하역인프라가 취약하기 이를테 없다. 공영시장의 기계하역률은 고작 3%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물건이 반입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10시경까지 가락동 일대는 교통지옥이 되기 일쑤고, 시장내에서는 리어카나 밀카를 움직이는 인부들에 걸려 다닐수도 없을 정도다.

산지의 창고보관 시설로부터 운행트럭, 하역장비, 물류작업인력, 부대서비스 시설 등 제반 여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4. 농산물포장화의 개선방향

농산물포장화는 해당 산물의 신선도 유지는 물론, 운반중의 압상 등 외형손실을 막고 상품성을 높여 거래를 촉진함에 있다. 시장내에서는 경매를 신속히 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보호와 하역기계화 등 물류유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목적이 있다.

이같은 사업이 원만히 정착발전키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생산농민 각급유통주체, 소비자의 인식제고와 역할분담도 요구된다.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지자체, 행정관서, 농협의 더쉽과 책임의식도 필요하다.

정부는 2004년까지 농산물의 공동출하는 80%까지, 채소포장출하율 90%, 패렛트적재 50%, 하역기계화는 90% 달성을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물적유통비가 국내총생산액(GDP)의 16~17%에 달하는 61조에 달하고, 이중 농산물은 특히 다른분야의 평균 16.5%보다 높은 19.4%를 보이고 있다.

운송비 6천8백억원을 비롯, 하역비 5천5백억, 보관비 5천억, 물류관리비 7천3백억원 등 농산물물류비는 연간 총 3조5천억 규모이다. 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할 시 40%에 해당하는 1조6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계획대로 34개 전국 대규모 공영시장이 기동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지 유통시설인 물류센터 16개소가 건설되면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재동에 짓고 있는 농협유통 물류센터는 벌써부터 유통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포장시설 → 장비를 일관되게 단위화물 적재 시스템(Unit Load System)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앞서 언급된 물류 흐름의 적체·불통을 풀 수 있게 된다.

관련된 패렛트 적재 출하와 하역 기계화의 일관체계를 구축하면 전자상거래(EDI)를 확대 실시 하여야 한다

5. 포장배송의 적정 거래질서 확립

배추를 비롯한 포장화 미진 품목의 적정거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실천의지와 생산농민 소비자 유통관련 인들의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된다.

최근 가락시장에서는 고액의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고 배추쓰레기를 잘게 부수는 분쇄기, 폐스티로폼을 녹여 분해하는 용융기를 구입,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적한 쓰레기 문제에 우선은 도움이 되겠으나, 포장화 물류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정책에 역행하는 단면으로도 비쳐진다. 정책의지가 빈약한 점은 한두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데 산물상태 반입에 대한 쓰레기 유발분 담금은 배추 1t당 5천원이다. 이를 고속도로 주행중 빙병이나 휴지를 투기하면 1백만원까지 벌금을 내는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동안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부작용과 이해집단의 반발

보다 강력한 규제가 뒤따랐어야 했음에도 문민정부가 너무 민원에 얹매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담합이나 저가 경매유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나타나면 농안법 등 법에 따르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지고 하역노조 퇴직금 보상 등 소요예산도 과감히 확대 편성,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예컨대 차량 적재함 문제도 그렇다. 전국 5만대의 5t 트럭이 100% 비규격화돼 이들 전량을 광폭으로 개조한대도 대당 80만원씩 모두 합쳐 400억원이나 된다.

산지농가에 대한 포장개선 지원금을 대폭 확대케 하고 소비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데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특히 소비자에서의 포장박스 처리문제에 관한 별도의 연구가 요망된다.

이와 함께 포장상품 반입우대조치를 지금보다 더 후하게 하는 반면 산물출하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더욱 강화케 해

야 할 것으로 본다.

중도매인, 수집상인 등 유통관련 업계에 대한 인센티브제 내지 사기독려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 사업성공의 60~7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유통관계자들임을 고려할 때 적극 참여하는 유통인에 대해서는 불투명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에 못지않은 사회적 성취감을 주고 사명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처럼 너무 급히 서두르면 체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도 농산물포장화 및 물류체계 개선은 다른 공산품보다 10년~15년 뒤늦게 이루어졌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생산자·유통인·소비자의 오랜 고정관념과 관행을 타파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다. 단칼에 두부모 베듯이 일괄적용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현실인정과 개혁을 병용할 수 있는 향후 10년의 청사진이 제시 되어야 할것으로 본다.